

◇오인철 대한건설협회도회장



은 8일 오전 11시 경기도 용인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회장단 간담회에 참석해 건설환

경 변화 및 대응전략 방안에 대해 논의.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도회장은 8일 오전 11시 경기도 용인 레이크사이드CC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회장단 간담회에 참석한다.

정부 하도급직불제 시행

도내 체불임금 136억원·실효성 의문

정부가 공공공사 대금을 직접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평창 동계올림픽 공사 등에서 발생한 체불 임금 문제가 사라질 지 주목된다.

7일 전국건설노동조합 강원본부에 따르면 최근까지 도내·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은 총 22개 공사에 135억9000여만 원이다.

전체 체불임금 중 자치단체나 공기업 등 공공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체불액이 130억4000여만원으로 96%를 차지한다. 특히 정선 중봉 활강경기장 30억원, 평창 알펜시아 하얼빈 빙설 대세계 축제 11억원, 올림픽 경기장과 진입도로 등 평창 동계올림픽 조성 공사와 관련된 직·간접 체불임금이 절반 이상이다.

정부는 체불임금 문제가 해소되지 않자 공공기관과 광역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대금의 절반인 16조원을 원청업체를 거치지 않고 하청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추진키로 했다.

'하도급 직불제'는 발주자가 원청업체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체에 임금·장비·자재·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올 한 해 하도급업체에 직불되는 공공 공사대금은 15조9469억 원이다.

하지만 건설현장에서는 '하도급 직불제'에 대한 시선이 차갑다.

이는 공사대금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해도 부도 등 체불 상황이 발생하면 임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건설 근로자들은 공사 대금을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전국건설노동조합 강원본부 관계자는 "강원도내 공사 현장 체불 임금 때문에 도지사까지 나섰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공사 대금을 업체에 줄 것이 아니라 건설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해야 임금 체불 문제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은복 rio@kado.net

원주시 공사 지역업체 참여제

지역경제 3000억원 파급 효과

원주시가 '건축공사 지역업체 참여제'를 통해 3000억원대 규모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원주시는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건축공사 지역업체 참여제'를 본격 시행 중이다.

건축공사 지역업체 참여제는 건설공사 착공신고때 원주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시공, 건설자재, 인력, 장비 등 건설분야에 투입되는 총공사비의 30% 이상을 지역 업체로 배정하는 제도다.

시는 이 같은 제도 시행을 통해 첫째인 2014년 '혁신도시 중흥S클래스 프라다움 아파트'와 '단계지구 벨라시티 아파트' 건설과정에서 총공사비의 29.73%, 25.75%에 해당하는 약 582억 원을 지역업체에 배분했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도시 모아엘가 아파트, 봉화산2지구 푸르지오 아파트, 단구동 한신휴플러스 아파트, 롯데캐슬 더 퍼스트 1,2차 아파트, 호반 베르디움 아파트 등 올 원월 현재까지 8곳의 공동주택 건설공사가 참여, 무려 2862억원의 공사물량을 지역에 배정했다.

시는 올해부터 '건축공사 지역업체 참여제' 대상을 공동주택에서 10층 이상 대형건축물로 확대, 시너지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사업 주체와 지역업체간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이 라는 점에서 호응이 높다"며 "앞으로도 주택건설 사업에 지역 업체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원주/정태욱 tae92@kado.net

건설현장 '찾아가는 안전컨설팅'

원주국토관리청

원주국토관리청(청장 전만경)이 도내 총 공사비 100억 미만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컨설팅'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원주국토관리청은

도내 자치단체로 부터 신청을 받아 춘천시 4곳, 인제군 3곳 등 총 13곳 건설현장을 컨설팅 대상으로 선정했다.

또 컨설팅 건설안전 도우미로는 현장관리 경험이 풍부한 건설현장 전문가 42명을 구성, 컨설팅 대상 현장과

라인을 구축한 후 현장관리 과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키로 했다.

원주국토청은 이달 중순까지 이들 컨설팅 현장을 찾아가 현장관리 상태를 진단,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개선사항을 계속 모니터링해 건설현장 관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원주/정태욱

車 못 다니는 ‘허울도로’ 강원, 전국의 18% 차지

재정자립도 21.5%에 불과
지정만 해놓고 공사 못한
미개통 도로 1447km 달해

강원지역의 미개통 도로 길이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 가운데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열악한 지방재정 탓에 도로 지정만 해놓고 실제 공사는 미뤄지고 있어서다.

7일 행정자치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강원도의 미개통 도로는 1447km다. 미개통 도로는 필요에 의해 도로로 지정은 됐지만 실제 공사는 하지 않아 차가 다닐 수 없는 곳을 의미한다.

강원도의 미개통 도로 길이는 전국에서도 높은 수준에 속한다. 전국 미개통 도로 길이는 8030km인데 강원도가 18%가량을 차지한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강원도보다 미개통 도로가 긴 곳은 경상남도(1593km)뿐이다.

강원도의 미개통 도로가 많은 이유는 지방재정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자체의 자체 수입 여건이 나빠져 갈수록 중앙정부의 교부세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도로 공사를 지자체가 단독으로 시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강원도의 재정자립도는 21.5%에 불과하다. 전라남도(17.8%)에 이어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다. 전국 평균(45.1%)과 비교해도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실제 강원도의 미개통 도로를 분석해 보면, 일반국도의 미개통 도로는 전혀 없



는 반면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방도(66km)와 시도(1004km), 군도(181km)에 미개통 도로가 몰려 있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80.3%)과 부산(61%), 경기(60.7%) 등은 미개통 도로가 없거나 상대적으로 짧았다. 서울은 미개통 도로가 없었고, 부산은 5km에 불과했다. 경기의 미개통 도로는 988km다.

문제는 당분간 지방재정 여건이 크게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올해부터 2020년까지 지방재정 수입은 연평균 2.3%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 관계자는 “도로예산은 교부세 내에서 사용해야 해 크게 늘리기 어렵다”면서 “도로도 한번 지정하면 다시 취소하는 일이 많지 않아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올 공공공사 절반 ‘하도급대금 직불제’ 적용

공정위, 공공기관 20곳·지자체 17곳 대상… 16兆 규모

올해 총 16조원 규모의 공공공사에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본격 시행된다. 대금 직불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직불조건부 발주, 발주기관·임사업자·수급사업자 간 사전 합의 등을 통해 발주기관이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직불하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정작 대금 체불이 주로 발생하는 자재·장비업체, 근로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없는 데다 수급사업자가 부도를 낼 경우 제대로 수수하기가 어려워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하도급대금 직불제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올해 하도급대금 직불제 대상 공사는 공공기관 20곳, 광역지자체 17곳이 발주하는 토지개발, 교통·항만공사, 에너지·환경시설 공사 등으로 총 15조9469억원에 달한다.

이들 발주기관의 올해 전체 발주 규모(34조2485억원) 중 절반가량에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적용되는 것이다.

이번 방안을 통해 하도급대금 미지급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지만 대금 직불이 사회적 약자인 자재·장비업체, 근로자에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불투명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박경남기자 knp@